

신자유주의 대한민국?

경쟁력 있는 국가-관념과 한국의 정치경제

서정민 | 연세대학교

김현준 | 연세대학교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한국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겪어온 정치경제적 변화를 국가정체성 담론으로 설명하는 시도이다. 본 연구는 국가-체계(state-system)적 특징에만 주목하는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를 국가-관념(state-idea), 즉 국가 제도와 사회를 포괄하는 상징적 정체성으로 본다. 한국에는 기존의 발전국가 전략이 한계가 드러나는 국내의 환경에서 국가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신자유주의 전략이 제도적으로 도입됐으며, 이때 기존의 국가-관념 역시 유지·발전해나가는 과정이 병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가 다루는 김대중 정부의 “제2의건국” 담론과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담론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국가-시스템상의 변화가 발전국가 기간부터 이어져 온 민족주의적 국가-관념 위에 안착되는 구실과 맥락을 제공하였다. 즉, “민족주의적 신자유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이 담론들은 사회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후퇴와는 별도로 기존의 국가-관념을 강화하면서 시장중심의 제도적 신자유주의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는 일종의 알리바이(alibi)를 제공하였다.

I. 서론

2012년 7월 27일 사설경비용역업체 “컨택투스(CONTACTUS)”가 SJM공장의 노조원들을 폭력 진압한 사례는 국가에 대한 관념과 현대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변화의 관계를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 사례에 대해 막스 베버의 고전적 정의에 의하면 “주어진 영토 내 정당한 폭력 행사 권한을 독점해야 하는 국가(Weber 1946, 82)”가, 국가 수준의 진압 시설을 갖춘 민영 기업의 과도한 폭력 행사를 방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한겨레21 2012/08/13). 이는 신자유주의적 민영화에 의한 국가의 제도적 후퇴를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 평가될 수 있다. 반면 해당 용역업체의 임원 인사는 노조원을 ‘중복세력’이라고 칭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일종의 “애국행위”로 정당화하였다(시사인Live 2012/08/13). 즉, 국가는 그들의 인식 수준에서는 후퇴하기는커녕 그들의 행위를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전히 남아있던 것이다.

한 편, 하비는 1980년대 대처리즘이나 레이저노믹스의 전개 과정에서 경제 제도상의 민영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와 국가주도의 민족주의가 강조되는 신보수주의가 병행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Harvey 2005: 85). 그렇다면 앞에서 제시된 “애국”과 같은 언술은 서구에서 먼저 나타난 신보수주의와 유사한 현상이라고만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가 수용되는 한국적 맥락과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의 성격을 풀어내는 다양한 관점의 도입을 필요로 한다.

기존 한국의 국가 성격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들은 국가의 특정 정책과 그것의 대상이 되는 사회 및 시장의 변화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국가의 성격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Im 1987; White and Wade 1988; Moon and Prasad 1994; Cheng, Haggard and Kang 1998; 이연호 2002; 이연호, 임유진, 정석규 2002; Sonn 2009; 윤상우 2009; 지주형 2009; 2011). 이 연구들은 사회로부터의 국가의 자율성과 국가능력, 경제 운영의 국가 및 시장 주도성을 가늠하거나, 반대로 사회에 이입되는 국가의 제도적 영향과 성격을 도출하여 한국을 ‘○○국가’—발전국가, 신중상주의 국가, 관료주의적 권위주의 국가, 규제(조정)국가, 또는

신자유주의 국가—로 명명(naming)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찰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가를 ‘국가—체계(state-system)’, 즉 사회와는 구별되는 제도적으로 실천되는 체제 및 국가구조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신자유주의가 지닌 다양성의 관점에서 한국을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라고 지칭한 윤상우의 연구(2009)는 신자유주의가 기존 한국의 발전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구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을 제도적 관점에서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들은 정책결정자들과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신자유주의의 제도적 도입에 대한 ‘자발적 동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를 국가—관념(state-idea), 즉 특정 영토의 구성원들이 국가 제도와 사회에 대해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 또는 상징적 정체성(symbolic identity)으로 보고자 한다. 국가—체제와 국가—관념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양면성은 일군의 정치경제적 과정들이 나타나는 두 가지 양상이며, 국가의 제도적 변화에는 특정 국가—관념의 구성과 조정 과정 역시 수반된다. 본 연구는 국가의 특정 정책들에 수반된 국가—관념, 즉 국가 공동체 담론 전개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제도 변화의 맥락을 제공한 김대중 정부의 “제2의건국” 담론과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수용담론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사회(시장)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후퇴와는 별도로, 발전국가부터 지속되어 온 “경쟁력 있는 국가—관념”의 유지 또는 강화를 수반한 “민족주의적 신자유주의”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¹⁾

1) 관련하여 외교정책결정론의 관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추진요인을 노무현 개인의 지정학적 인식을 가지고 설명한 김주희(2012)의 연구 역시 한국 신자유주의의 제도적 변화에 끼친 국가—관념의 영향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는 국제정치적 관점보다는 국내정치에 특정 제도에 대한 자발적 동의의 형성 과정으로서 국가—관념 담론전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신자유주의와 경쟁력 있는 국가-관념

1. 국가-관념 분석의 의의

국가-관념 또는 국가 정체성은 그 국가의 통치 범위가 되는 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며 사회 질서를 반영하는 이미지를 일컫는다. 모든 집단 정체성은 사회 내 각 개인이 자신의 존재를 집단적인 내러티브에 투사함으로써 유지된다(Balibar 1992: 93). 그러므로 국가정체성의 변화는 변화하는 사회 질서의 청사진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인 개인들의 행동의 동기를 부여한다. 즉,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은 지극히 사적인 개개인의 심리구조에서 작용하여 자아의식과 행동을 규정하되 그들이 이루는 사회의 성격에 영향을 주며, 그에 의한 사회 질서 변화는 사회와 국가를 아우르는 새로운 정체성 이미지를 창출한다(Greenfeld 1992, 20-21).

이러한 국가-관념은 공(public)/사(private)의 구별, 국가의 권한(competence)을 규정하는 다양한 통치 기술에 의해 반복된다. 이러한 기술들은 사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사회 전반을 통치하고 있다는 관념, 즉 일관적이고 보편화된 “신화화된 추상(mysticized abstraction)”으로서의 국가를 지속시키는 효과를 야기한다(Foucault 2007, 87-114). 미첼은 이를 두고 국가라는 현상, 또는 국가 효과(state effect)는 일상적이고 물질적인 실천(즉, 국가-체제의 작동)이 추상적이고 비물질적인 외양(즉, 국가-관념)을 띄게 하는 기술의 작동을 통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Mitchell 1999: 76-7).

이는 관념으로서의 국가와 제도적 통치의 물질성을 구분함으로써 국가의 이중성을 암시한다. 미그달의 “사회속의 국가(state-in-society)”에 의하면 국가는 사회 전반을 아우르고 일관적이고 명확한 경계를 가진 자율적이고 강력한 기구의 이미지(image)와, 국가 행위자 및 기구들의 일상적인 정책 수행(performance)의 측면인 실천(practice)으로 이루어져있다. 국가 이미지에겐 사회의 보편적인 단일한 도덕적 기준, ‘진정한 옳음’이 내포되어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정책 또는 행정 등 국가기구의 “공식(official)” 행위들에 의해 실현된다. 하지만 정책의 본

래 취지와는 별도로 사회 내 다양한 세력들이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따라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으냐(What is *the* right?)” 또는 “무엇이 공(public)/사(private)인가”를 두고 논쟁적인 실천들이 이루어지며, 이는 국가기구의 정책수행과 맞부딪히며 국가의 일관성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킨다. 즉, 국가는 다양한 세력들이 “그 사회를 가르는 정당한 원칙에 대한 정의(definition)”를 두고 다투는 “권력투쟁의 장(field)”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국가는 단일하고 일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러한 단일한 이미지와 그것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다양한 실천을 내포한 모순적 존재이다(Migdal 2001, 1-23).²⁾

신자유주의 도입과정 및 이후의 한국의 국가성격을 파악함에 있어서 국가-관념을 점검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의 이중성’을 유념한 작업이다. 국가-관념 분석은 특정 정치경제 전략이 도입되는 정당성(legitimacy)과 또는 맥락(context)을 설명해준다. 이는 정치경제의 제도적 변화를 야기하는 전략 담론의 다양성과 매개적 역할을 강조하는 지적 흐름과도 연관되어 있다. Jessop과 Sum이 주도하는 문화 정치경제학(Cultural Political Economy)에 의하면 특정 정치경제적 제도의 변화는 복잡한 현실을 매개하는 담론적 다변화(variation) 및 기호현상(semiosis)을 필요로 한다. 이를 통해 특정 세력의 우위와 특정 전략의 유리함이 부각되어 전략적 선택(selection)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기존 또는 새로운 전략 및 세력의 선택적 유지(retention)와 강화(reinforcement)가 이루어진다(Jessop and Sum 2001; Jessop 2004; Ji 2013, 34-36).³⁾ 즉, 위기관리담론이 특정 위기, 원인(또는 책임자), 전략을 선택적으로 강조함에 따라 편향된 해결책이 제시되고 담론과 실

2) 미그달은 국가의 이중성을 빗대어 버트란트 러셀의 문구를 인용한다. “우리는, 사실, 두 가지의 도덕을 나란히 지니고 있다. 하나는 우리가 말은 하지만(preach) 실천하지(practise) 않는 모습과, 다른 하나는 우리가 실천하지만 좀처럼 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 Bertrand Russell, “Eastern and Western Ideals of Happiness” in *Sceptical Essays* (New York: W. W. Norton, 1928), Migdal(2001, 19)에서 재인용.

3) 지주형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1997년 경제 위기 및 위기관리담론 형성과 해결담론이 관료, 재벌, IMF(및 국제금융자본), 민주노총 간의 정치적 투쟁을 거치며 지배담론 역시 지적인 국가-재벌의 유착, 노동자-민생 위기의 미비한 해결과 “금융위기”에 대한 편향된 제도적 변화를 야기하였고, 이는 일부 재벌 및 금융 자본의 유지 및 강화로 이어졌음을 지적한다(Ji 2013).

천 사이의 부정합을 초래한다. 이는 1997년 위기를 거치며 나타난 한국의 새로운 국가정체성 담론과 정치경제적 제도적 실천 사이의 차이 역시 설명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즉, 1997년 이후의 국가 담론을 살펴보는 것은 담론과 실천의 불일치를 일으킨 전략적 선택성(strategic selectivity, 본문 2절 참고)이 나타난 맥락(context)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가 제시하는 이상화된 국가-관념과 1997년 이후 등장한 한국의 국가담론,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인 실천을 비교함으로써 국가-관념적 측면에서 바라본 신자유주의 한국의 특징을 가늠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적 맥락에 “신자유주의 위치짓기(locating neoliberalism)”(Hackworth 2007)를 시도한다고 할 수 있다.

2. 신자유주의의 국가-관념과 전략적 선택성

기존 경제적 축적 체계의 한계와 위기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경제 행위자들, 발전모델, 규제에 대한 담론이 생산되는 계기가 되며, 이 때, 담론 체계모니를 차지한 모델은 행위자 및 이익 규정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수립하게 된다(Jenson 1990, 666; Jessop 1999, 396, 2004; Jessop and Sum 2001). 서구에서는 대공황 및 2차 대전 이후 국가가 시장의 활성화, 개인의 권리를 보장을 위한 복지확충, 시장의 외부효과를 조정하기 위해 재정정책 확대 및 시장조정을 시행함으로써 ‘국민경제’를 일군 바 있다(Hackworth 2007, 6-11). 이러한 경제적 축적 체계로서의 케인즈적 복지국민국가(Keyensian Welfare National State: KWNS, Jessop 1999, 381)는 1970년대 오일쇼크, 스태그플레이션, 신흥 발전국가의 추격,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의 금태환정책 포기에 따라 위기를 맞게 된다.

이 때 신자유주의는 소위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영미권 학계의 담론 생산 구조에 의해 ‘관념적인’(또는 ‘이상적인’)으로 번역될 수 있는 ‘ideal’한 형태를 취하여 전 세계적인 ‘대세’로 전파되었다. 신자유주의 국가는 사유재산권의 명백한 보장, 시장의 자유 경쟁을 최상위 가치로 삼는다. 이를 위해 규제의 축소/민영화에 따른 시장의 자율적 규율을 조장하고, 사유재산권 개념이 불명확할 때에는 국가가 주도하여 강력한 시장 시스템을 부여하기를 시도한다. 또한 생산요소의

전 지구적 이동이 이루어지며,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며, 자본주의가 금융자본 중심으로 재편된다. 신자유주의 국가는 가치 판단 및 행복의 고양의 주체로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자율적인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이상으로 한다(Harvey 2005, 64-67; Hackworth 2007, 3-11).

또한 신자유주의의 전 세계적 확대는 기존 국민경제(national economy)의 틀로는 답을 수 없는 초국가(supra-national; 예를 들어 국제기구 및 국제 NGO) 및 하위국가(sub-national; 예를 들어 지방정부 및 비정부 단체 등) 수준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출현을 야기했다. 이는 특정 영토적 범위의 정책 결정 주권을 점유하는 국민국가의 경제규제 방법, 대상, 역할 및 정책 결정 및 공조 체계 등의 다범위적(multiscalar) 및 다수준적(multitier) 변화로 이어졌다(Jessop 1999). 또한 기존 국민국가의 시장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는 ‘국민경제’라는 경제영토의 범위, 즉 특정 국가의 경제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통치 및 사법체계의 영향 범위까지 넓힘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들을 포괄하는 국가 정체성의 외연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⁴⁾

이러한 신자유주의 사조에 대응하기 위해 서구 국민국가에서는 기술적 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일련의 정책 사조가 등장했으며, 제습은 이것을 “슈페터주의적 근로국가(Shumpeterian Workfare State)”라 칭한 바 있다. 슈페터주의적 근로국가 담론은 1) ‘완전 고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포기, 노동유연화를 긍정하고, 2) 복지 등 재분배 문제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며, 3) 거버넌스 확대에 의해 국가의 역할을 감소시키고 공기업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의 민영화를 도모한다(Jessop 1999, 392).

또한 신자유주의 국가는 개인성의 강조에 의해 사회가 파편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민중의 집합적 의지를 수렴시킴으로써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경쟁력 있는 주체로서 지속적으로 국민국가가 작동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배타적

4)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아 금융허브국가” 담론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영향력의 범위를 동북아라는 범국가적 단위로 확대하여 보다 더 넓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상상하는 상징적 표현이었다.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 구성원들이 국가-체제 및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한 순응/저항에 따라 구별되어 선별적으로 특혜/억압이 제공되기도 한다(Jessop 1990, 161, 209-212; Harvey 2005, 85; 송백석 2005, 538).⁵⁾ 예컨대 영국에서는 경쟁적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작고 강한 국가’를 내세운 대처정부가 민족주의적 국가-관념 표상을 고양하고(Harvey 2008, 85), 신자유주의에 걸맞은 생활양식을 전 사회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포퓰리즘적인 도덕주의로 정당화하는 문화정치를 통해 신자유주의 이념을 구현시킨 바 있다(홀 2007, 89-122).

정리하면,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에 의한 신자유주의 사조 속에서, 개별 국가들은 기존의 국민국가의 정체성과 국민경제라는 테두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일련의 제도적, 담론적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경쟁력 있는 국가-관념’ 담론은 곧 ‘국가가 단일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⁶⁾는 관념 그 자체이자, 그 관념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취하는 “일반적인 통치 기술(*general tactics of governmentality*)”(Foucault 2007, 109)이다. 이는 한 국민국가에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제도적 조치가 도입되는 전략적 맥락 또는 알리바이(alibi)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전략적 맥락은 전지구적 자본, 기업 등 특정 세력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정책이 ‘국익’ ‘민족 생존’등 일반적인 이해를 충족시키는데 유리하다는 점을 일반 대중 전반에 납득시키는 구실이 된다. 여기서 그 ‘유리함’이 결정되고 담론

5) 특정 자본축적 전략이 한 국가경제 모두에게 유리함을 대중에게 설득시키는 헤게모니 담론 시도를 국민-민중 프로젝트(nation-popular project)로 칭할 수 있으며, 대처 정부의 양분 전략은 ‘두-국민(two nation)’프로젝트로 분류된다. 반면에 일반 민중 ‘모두’를 동원하기 위한 물질적 특혜와 상징적 보상을 확장적으로 제공하는 케인즈적 복지국민국가는 ‘한-국민(one nation)’ 프로젝트로 칭할 수 있다(Jessop 1990: 209; 송백석 2005: 537).

6) 정책결정자들 입장에서 국가를 단일하고 일관적으로 유지시키는 바야 모든 정책의 당연한 목적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관념’수준의 국가 유지는 국가의 상태 변화(variations of states), 또는 국가의 실패를 단순히 ‘기준으로부터의 이탈’로만 설명하게 함으로써 사회 내 다양한 규칙을 지닌 집단의 갈등과 실질적인 국가 상태(actual states)에 대한 풍부한 고찰을 저해할 수 있다(Migdal 2001,15).

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맥락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전략적 선택성’이다. ‘전략적 선택성(strategic selectivity)’이란 특정 시점의 국가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 (다른 전략에 비해) 특정 정치적 전략에 보다 개방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국가 유형 및 형태는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접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며 특정 경제 정치적 전략이 그 국가 시스템의 시장(사회) 개입 양식과 동원 가능한 자원 현황에 유리 할 수 있다. 정책 결정자들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으로 유지되어 온 기존의 사회구성(social formation)에 근거하여 사회적 유대(social cohesion)를 유지시키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전략을 발전시키기 마련이다. 그러한 국가의 전략적 선택성은 다양한 사회세력들 간의 관계, 과거의 전략적 선택성, 그리고 특정 경제담론이 ‘유리하다’고 사회 행위자들에게 구조적으로 수용되는 담론적 선택성(discursive selectivity)의 영향을 받는다(Jessop 1990, 260-2; 2008, 6, 36-41, 49).

Ⅲ. 한국의 국가-관념과 신자유주의의 수용

1. 한국의 신자유주의 도입 간 전략적 선택성

한국 역시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사조에서 기존 발전국가라는 전략 패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경제’의 테두리를 지키는 데 유리한 전략을 취해왔다. 한국의 신자유주의 수용 당시 전략적 선택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전략적 선택, 각 사회 세력의 이익, 국제사회의 환경, 그리고 이는 다음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한국 신자유주의 담론 수용 시 전략적 선택성 영향 요소

구 분	내 용
과거의 전략적 선택	• 1960-70년대의 발전국가 전략
각 사회세력의 이익	• 국가운영자(정책결정자) : 정치적 정당성 확보 • 기업(재벌) : 이윤 축적 지속·확대 • 노동 : 생산 과정 간 사측과 동등한 지위 보장, 정치·경제적 기본권 확대 • 시민사회(대중) : ‘국가 발전’에 따른 삶의 양적·질적 향상 기대
국제사회의 변화	• 냉전의 종식 : 공산주의적 생산양식(생산수단의 공동 소유)에 대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생산수단의 사유화)의 승리 • 오일쇼크 등 기존 자본주의 체제의 노선 변화 필요성 증대
담론적 선택성	• 케인즈적 복지국민국가담론 퇴조 및 신자유주의 담론 등장 - 정치경제의 탈민족화, 탈국가화(denationalization, destatization) - 탈개입, 상품화, 경제 주체의 개인(민영)화, 자본주의의 금융화 등

한국의 신자유주의 도입을 논할 때 과거의 전략적 선택성으로서 한국의 발전국가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미-소 냉전 구도에서의 미국의 전폭적 지원과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배경으로 한국은 수출 중심 및 경쟁 선호적인 발전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Gray 2011). 한국의 발전국가(신증상주의국가)적 전략의 특징을 나열하면, 국가에 의한 부문/산업별 선택적 개입(selective intervention), 보조금 및 환율조정을 통한 가격 왜곡(getting price wrong),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선도적 역할(guided market)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White and Wade 1988; Amsden 1992). 덧붙여 한국의 발전국가는 1960년대 말 및 1970년대 초반 경공업→중화학 공업의 산업 ‘심화(deepening)’과정을 거칠 때 임금 억제를 기반을 둔 노동 경쟁력 확보를 지속하기 위해 정치과정에서 노동부문을 견제 및 배제했던 관료주의적 권위주의를 특징으로 한다(Im 1987). 1970년대 말 물가 폭등과 임금 상승 압박 등이 노동 쟁의 등이 정치,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10.26에 의해 유신정권이 막을 내림에 따라 등장한 전두환 정부는 기존의 재정정책 중심의 국가개입을 줄이고 통화 안정 및 민간 부문의 비중을 확대하는 자율화, 안정화, 개방화를 추진한다(이장규 1991; 강경식 1992, 149-170).

복수의 학자들이 한국 신자유주의의 근원을 이 시점으로 설정한다(Gills 1996; Heo and Roehrig 2010, 87-98; Sonn 2009; 지주형 2011; Gray 2011). 특히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경제자유화’라는 언술로 도입되면서 민간 요소의 자율성 보장 및 자유화가 동시에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로 해석되기도 하였다(지주형 2011: 113). 이는 민주화 이후 집권한 각 정부들이 시장의 자유화 및 자율적 규율(조정) 도입을 통해 국가 중심의 권위주의 경제를 개선하고, 시장의 공정 경쟁원칙을 저해하는 재벌집중 경제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는 시도들로 계승되었다(조성렬 1996; 정태환 2005; 이연호 2006).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기존 발전국가에서 확보되었던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는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1980년대 한국은 미국, 일본 등 기술선진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등 신흥 노동집약산업 국가들의 추격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국제자본의 자유로운 도입과 노동유연화를 통한 고임금 압력 해소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한국은 신자유주의 도입을 시도했으며, 이는 1970년대 중화학 공업 중심 산업 고도화 이후 증대하던 노동세력을 제도적 민주화를 통해 합법 노조라는 형태로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능하였다(Gray 2011, 308-316). 즉 경제 자유화,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될 수 있었던 제도적 민주화 역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동기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신한국” 및 “세계화”라는 국민-민족 프로젝트를 수행한 김영삼 정부의 담론에도 나타난다. “신한국” 담론은 시장 원칙의 자율적 준수를 확립하고, 국가 규제의 비효율성과 민주화 이후 증대된 노동 쟁의의 비생산성으로 대표되는 한국병을 극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김영삼 1993; 강명구·박상훈 1997). “세계화” 역시 해외기업들이 고도의 기술과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 개방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자생적인 혁신 기술을 확보하여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Gills 1996: 680). 즉 국내법으로 완벽히 통제 불가능한 초국가적 행위자들이 증대되고 기업의 이윤추구 역시 탈국가화 될 수 있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역시 국가경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임기응변, “재치 (또는 수완)(savoir faire, Gills 1996)”으로 선택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김대중 정부 이후 신자유주의가 경제성장, 수출증대, 캐치업과 같은 기존의 발전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되었다는 점(윤상우 2009)에서도 지속된다.

2. 김대중 정부 : “제2의건국”

“신한국” 및 “세계화” 담론은 기존 국가개입의 간섭을 최소화 하고 정책적 개입을 경량화 한다는 명목으로 ‘탈규제화’로 해석되었으며, 이는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최소의 규제 장치 역시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짐으로써 1997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고 일컬어졌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8.15 및 건국 50주년 경축사에서 “제2의 건국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관·민 협력의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결성 되었으며, 다음 정부 임기 시작 후인 2003년 4월까지 “기본이 바로 선 세계 일류국가”라는 슬로건으로 “제2의건국” 운동이 진행되었다. “제2의건국”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 및 생산적 복지의 실현”을 이념으로 하여 자유(정치적 참여 및 시장 경쟁, 인권), 정의(부패일소 및 생산적 복지), 효율(근면성 및 경쟁력강화, 고 효율, 시장 자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3대원리로 내세운다. 또한 구체적 7대 과제로 1) 참여민주주의 실현 2) 자율적 시장 경제 완성 3) 사회정의 실현 4) 보편적 세계주의 구현 5)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 6) 협력적 신노사 문화 창출 7) 남북 간 교류 협력시대 개막을 제시하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단체, 민간단체가 참여하되 국민이 주체가 되어 정책적 제도화 및 의식 및 생활 개혁을 수행하여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정립하는 범국민적 운동이었다(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1999; 2003).

일단 7대 과제 중 “참여민주주의 실현” “자율적 시장경제 완성” “사회 정의 실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신한국” 및 “세계화” 담론과 마찬가지로, “제2의 건국” 담론역시 한국의 정치경제의 문제를 국가주도 발전 전략의 이면인 정경유착, 관직금융,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 정치 및 시장의 행위자의 능력이 배제된 불투명, 불공정, 폐쇄적인 참여 및 경쟁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공정하고 형평 있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시장원리에 민주주의를 도입하기를 시도한다. 이는 기존의 ‘탈규제’로만 해석되던 ‘규제의 민영화’의 폐해, 즉 국가중심의 권위주의적 문화가 잔존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를 의식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시장규제의 제도적 특징이 영미식의 규제국가의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제2의 건국” 역시 기존 “신한국”이 실패했던 시장 질서의 준수를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목표의 연장선 위에 있었다. 특히 “정치적 자유도가 높을수록(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자체 조정능력(위기 대응력)”(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2003)이 높다든지 “국가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1점이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 투자는 25~30%씩 증가”(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1999, 22)한다는 표현들이 등장한다. 여기에는 시장원칙의 확립이 단순히 발전국가의 권위주의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청렴도와 공정한 경쟁이 국제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깔려 있음을 보여준다. 즉 민주주의가 정치와 경제를 불문한 참여주체의 다원화와 규율의 자율적 준수로 해석되고, 이것이 시장원리의 자율적 작동과 맞물리며 신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이상과 부합하였던 것이다.

“보편적 세계주의 구현” 과제에서는, “세계 기준(Global Standard)”으로서 “자유와 민영화, 탈규제의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이 표준화 되었”음에 불구하고 한국은 “통제와 보호”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역행”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① 기업경영 및 퇴출 제도의 투명성 제고 ② 경쟁원리에 입각한 금융시스템의 확립 ③ 국제금융 센터의 전략적 육성 ④ 환경친화적 경영의 정착 ⑤ 부패 경영 관행의 청산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공동체주의에 입각하여 국제적인 규범을 스스로 수용하고, 세계분화와 역사에 대해서 편견 없는 태도”를 갖추고 “한국인으로서 주체성”을 가짐으로써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의식”을 강조한다(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2003, 80-01). 이는 당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독선적 민족주의”(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2003, 80)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민간부문의 반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는 또한 동시에 앞에서 강조한 시장 규율의 자율적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신노사문화 창출” 과제에서도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과제 수행을 위한 “생산적 복지체계”와 “사회적 안전망”확보는 노동유연화로 인한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재취업 및 자립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 알선 등 사회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폭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원만한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노동시장의 활성화와 성숙한 노사문화의 정착이 경쟁력의 새로운 핵심”으로 부각되는 추세에 적응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2003, 81-82, 94-97).

하지만 “제2의건국” 담론과 시장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개입과 급속도로 진행된 금융화는 이상적인 신자유주의 관념과 신자유주의 도입 간 한국의 국가-관념의 차이, 그리고 이러한 국가-관념과는 별도로 나타난 제도적 실천 간의 불일치를 보여준다. 우선 김대중 정부 스스로 국가가 원활한 시장질서 작동을 위해 개입하는 시도를 “질서 자유주의”라는 표현으로 칭하였으며, 일례로 경제 정책 입안 시 청와대에서 5대 재벌 최고경영자들과 협상 자리를 갖거나 노사정 위원회를 이루는 당사자로서 노동유연화로 야기될 수 있는 노-사 분류를 조정하기 위한 간섭을 지속한다. 특히 국가가 경영효율성 증진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사업구조조정을 실행하거나 공적자금 등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금융감독위원회중심의 강도 높은 개입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국가의 시장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조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Kim 2005: 474-477; 이연호 2002: 73-80). 특히 경제개혁을 공동체적 가치를 통해 정당화시키고 경제 도약을 시도하는 경제이념 및 운용방식은 탈민족적인 신자유주의 국가의 이념과는 거리를 보인다(이연호 2000, 297; Kim 2005, 473). 물론 금융위기 이후 시장의 자유화가 가속화되고 초국가적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실증적 결과들이 존재했다(Kim 2005, 473). 하지만 경제 개혁의 동기로서 국가 경제의 발전과 도약을 통한 공동체주의적 목표를 정당화하는 “제2의건국” 담론은 김대중 정부를 관념적 수준에서는 ‘국가 규제의 소멸과 자율적인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 국가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제2의건국” 담론은 기존의 ‘경쟁력있는 국가-관념’을 유지하면서, 제도적으로는 시장자유화, 금융화, 노동의 유연화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거부감 없이 수용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성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노무현 정부 : 국가-관념으로 풀어 본 한-미 FTA

보수/진보 양 진영 모두의 비판에 휩싸였던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역시 김대중 정부 기간의 신자유주의 기조를 이어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정권 말까지 지속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 및 금융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계기로 인식되었다.

특히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SD)등 일련의 조항들에 의해 국내 사법질서 및 국가 주권이 침해되고 글로벌 금융자본 등의 이익만 극대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이해영 2005; 김진영 2007, 156; 김관옥 2011, 290). 게다가 NAFTA로 미국과 FTA를 맺은 멕시코, 캐나다의 사례들을 원용하며 한-미 FTA로 인한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로의 편입, 노동 부문의 취약, 사회적 양극화 상승과 더불어 절차적 민주주의의 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었다(장상환 2005; 2007).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일련의 흐름을 두고 ‘진보진영’에서는 노무현 정부를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 국가 등으로 지칭하며 공격하였으며, 이에 대통령 스스로도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형용 모순적 신조어로 정부의 입장을 방어하기도 하였다(유종일 2006; 최태욱·이정우 2007; 김관옥 2011: 276). 이러한 자기 설득논리는, FTA가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담론을 구체화하는 세부 전략으로 고려되었으며, 이러한 담론 전개가 “제2의건국”과 마찬가지로 점차 기존의 민족주의적인 ‘경쟁력 있는 국가-관념’으로 수렴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국가정체성 담론인 “동북아시아대구상”에는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한국이 역내 국가들의 경제협력을 이끌어내는 거점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국가-관념이 존재했다. 이는 유럽연합의 기점이 된 슈만플랜 및 마샬플랜 등의 경제협력처럼 동북아경제협력이 동북아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다자간 FTA가 대통령인수위원회 시기부터 추진되었다. 즉 FTA는 단순한 통상협정이라기보다 ‘국민경제’의 공간적 범위를 넓히고 한국이 동아시아의 “금융·물류·운송의 중심이 되는 거점국가라는 국가 정체성”(우정은 2003)을 실현하기 위한 하위전략으로서 참여정부 정책결정자들에게 수용되었다.⁷⁾

하지만 2004년 5월 출범한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시기부터 협력의 중심축이 경제 협력에서 외교안보협력으로 바뀌었으며, FTA업무 역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사무처로 이관됨으로써 독자적인 관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는 오히려 “동북아경제협력 \supset 동북아FTA”의 포함관계가 “동북아구상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전략 = 동북아FTA”의 단선적 등식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가져왔다. 하지만 한-일 FTA가 결렬되고 중-미간 경쟁구도가 고조됨으로써 동북아전략의 궤도수정론이 제기되었는데, 여기서 동북아 FTA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중국과 일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3국간의 균형을 잡기 위한 지렛대로 삼았던 것이 한-미 FTA였다. 여기서 한-미 FTA 담론은 동북아구상의 하위 전략에서 “선진자본국(미국)에 대한 접근도를 높임으로써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우위를 견제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전략 구상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국정홍보처 2006; 김진영 2007: 156; 김양희 2008: 49-68; 김현중 2010: 9-15, 29; 박용수 2011: 59; 김주희 2012).

한-미 FTA가 최초로 정부 아젠다로 공식 제기된 2006년 대통령 신년연설(노무현 2006a)에는 당시의 경제 사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중국추월론에 의한 한국경제 위기설,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문제, 산업 다변화 및 공공 서비스 규모 증대 등 참여정부가 겪고 있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 FTA를 추진했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 특히 한국의 금융 및 서비스 산업 수준을 상승시키고 타 국가에 대한 대미 무역 접근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2006년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도 드러나 있다.

(중략)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보면 미국 시장에서 일본이나 중국보다 단 1%라도 유리한 위치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은 원래 중요한 시장이고,

7) 우정은은 장기적인 사회(정치경제)적 계획은 언제나 그 민족의 자기정체성 및 그 민족이 자신을 어떻게 상상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점에 근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에 대한 강조는 서울을 세계주의적인 도시로, 운송과 물류 거점에 대한 강조는 한국을 지역경제의 통합의 관념으로, 그리고 시베리아와 남-북한을 잇는 육상수송에 초점을 맞추면 민족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과 맺어진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다(우정은 2003, 26).

상징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수출품이 미국 시장에서 1%라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제조업은 거의 세계 일류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 법률, 세무, 컨설팅, 디자인 등 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나 교육, 의료 이런 부분은 아직 세계 일류가 아닙니다(노무현 2006b).

대통령은 같은 대화에서 한-미 FTA가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지금까지 우리 한국이 (제조업에서) 도전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FTA역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이 언급한 “세계 일류수준”의 “우리 제조업”이 “조선, 반도체, 전자제품, IT, 자동차”라는 점이다. 즉, 대부분 1970년대 재벌 중심 국가 개입에 근거하여 성장한 산업들이며, IT의 역시 전 정부의 육성정책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앞에서 꾸준히 제기된 바 발전국가 전략의 제도적 수정으로 신자유주의의적 개방을 시도하며 그것의 성패를 판단하는 ‘경쟁력 있는 국가’의 관념의 근거는 여전히 과거 발전국가 시기의 ‘성공 신화’에 두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전자의 “개방”이 투자자 즉, 금융자본 중심 제도 개편을 수반하는 데 반해 후자의 “신화”는 국가가 중앙은행을 매개로 산업자본과 해외투자에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현실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더구나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 가지는 우위를 강조하는 설명은 ‘동북아 협력’이라는 역내 국가 간 ‘포지티브-섬(positive-sum)’의 개념에서 경쟁의식이라는 ‘제로-섬(zero-sum)’ 구도로 지역질서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김진영 2007: 158-60; 김양희 2008: 64-8; 김주희 2012). 여기서 드러나는 국가-관념이 심화되면 열강 간의 ‘네거티브-섬(negative-sum)’ 구도로 변모한다. 즉, 국가 간 경쟁을 하지 않고는 도태된다는 위기의식과 “세계적 조류”를 거스름으로써 구한말의 쇠국과 국권침탈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신자유주의의 이상적 국가-관념, 즉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한 국가의 축소와는 달리 국가라는 관념의 테두리를 강화하는 경향을 지닌다. 실제로 한-미 FTA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은 한-미 FTA로 이루어지는 “개방”을 뒷받침하는 “역사의 교훈”을 언급한다.

(중략) 개방은 국수적인 분위기에서 비애국적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비슷한 경우를 100여년 전 조선의 역사에서 발견한다. (중략) 대원군은 개국이나 쇠국 이나의 역사적 기로에서 정치적 포석으로 척화비 건립과 같은 배외정책을 강행함으로써 불가항력적이었던 국제정세의 파도에 대처하는 데 실패했다. (중략) 늘 내치의 혼란으로 인한 대책수습에 골몰하느라 세계열강들이 앞다투어 무지한 조선 정부의 눈을 가린 채 조약·조규들의 굴욕적인 조항들을 들이대도 그 역사적 의미도 파악하지 못하였다. (중략) 국수주의에 뿌리를 둔 시대착오적 정책은 치명적 손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김현중 2011, 24-7).

정리하면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는 그것이 지닌 탈 국가적, 시장-기업 중심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동북아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전략이라는 국가-관념의 재고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미 FTA가 신자유주의적인 제도 변화를 야기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국가-관념의 신자유주의화까지 초래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미 FTA는 명백하게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었으며, 그것을 정당화 해주는 국가-관념은 ‘국민경제’라는 테두리를 유지/강화해 나가는 담론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즉, 이는 발전국가부터 강조되어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해 온 ‘경쟁력 있는 국가’ 관념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에도 내재되어 있는 발전주의적 성향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분석은 보다 명확해진다. 일례로 노무현 정부의 이주 노동자 정책 변화를 단순히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확대의 관점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가 주도적 경제발전 지속의 관점 역시 고려하여 분석한 연구(Lee and Kim 2011)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저자들은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적 민주주의(developmental democracy)”라고 지칭하며 소위 진보-보수 정권에 관계없이 개별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국가 ‘전체’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경제적 발전주의가 상호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위 논의를 종합하여 한국 신자유주의 수용과 국가-관념의 관계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신자유주의 개혁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환경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선택된 전략으로 수용된 측면에서 발전국가부터 지속되어 온 ‘경쟁력 있는 국가’라는 관념을 이어받고 있다.

2)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인해 국가-체계적 의미로서의 국가는 축소되거나 신자유주의적으로 변모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체계의 신자유주의화가 곧바로 국가-관념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즉 제도에 의해 변화하는 국가-체계와 제도 변화를 정당화해주는 국가-관념 사이의 차이가 존재한다.

3)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발전국가 기간 형성된 시장-사회에 대해 개입주의적인 국가-관념은 강화되거나 약화 될 수 있다. 한국은 국가가 개입해 온 발전주의 기간부터 강조되어 온 ‘경쟁력 있는 국가-관념’을 매개로 금융 자본과 일부 재벌 중심으로 귀결된 제도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제도가 수용된 맥락과 구실을 제공한 국가-관념과 국가-체계가 상이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4. 신자유주의 대한민국? 또는 “민족주의적 신자유주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국가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대처리즘 또는 레이저노믹스 시대의 영국과 미국 역시 민족주의적 정책 및 언술로 국가적 단합을 도모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국가는 국가-관념의 강조 및 강화와 국가-체계의 후퇴로 일반화할 수 있으며, 이에 한국 역시 일반적인 신자유주의 국가라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 프로젝트 및 정책결정자의 인식 뿐 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내재화 되어있는 국가주의, 민족주의적 성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영국과 미국은 근대 자유주의적 전통 하 국가-사회의 관계의 팽팽한 긴장, 시장의 실패에 따른 대공황이라는 역사적 경험 위에서 국가-체계 상 폭넓은 국가조정을 특징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도입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1970년대 ‘국가의 실패’의 경험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 범위를 축소시키는 동시에 국가 고유의 영역인 법적/제도적 통치를 강화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조정국가(regulatory state)로의 ‘선회’가 이루어졌다. 즉 서구의 신자유주의는 케인

즈주의에 의해 시장과 사회에 유입된 국가의 영향력,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거부하고 고전적 자유주의적 이상으로 “선택적인 복귀(selective return)”를 시도하는 움직임이었다(Hackworth 2007:9). 반면 한국의 신자유주의 도입은 민주주의의 심화에 의해 시민사회의 참여와 공동체적 복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서구의 그것과는 다른 독특한 양상을 띠었다(이연호 2006). 제도적인 변화만을 놓고 보았을 때, 장상환이 지적한 것처럼 서구가 자유주의→케인즈적 복지 국민국가→신자유주의 국가의 경로를 거친 반면에 한국은 발전국가→신자유주의 전략 도입으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장상환 2005; 2007).

한국적 맥락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의 국가-관념에서 국가와 시장, 더 나아가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이분화된 관념이 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⁸⁾ 즉 시장의 질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또는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 안에서 국가의 조정(regulation)이 이루어진다. 이에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담론이 이식될 때도 정책적으로는 발전주의 전략의 맥락을 극복하는 것과 함께 사회 인식 측면에는 기존의 민족주의적 관념을 충족시키는 한에서 수용될 수 있었다.

특히 IMF 구제금융이 도입될 때 ‘망국의 위기’라는 인식이 노-사-정을 아우르는 합의를 다소 원활하게 한 측면, 일반 대중의 인식에서 위기의 원인을 재벌들의 ‘반국가(민족)적 행태’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당시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식은 강력했다고 할 수 있다. 한-미 FTA역시 구한말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국가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므로 국가-관념의 시각에서 한국의 상황은 ‘신자유주의 대한민국’, 즉 신자유주의 이념에 따라 국가가 시장(사회)로부터 후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민족주의적 신자유주의”(최장집·박찬표·박상훈 2007: 170)라는 입장, 즉 발전국가적 민족주

8) 임성호(2007)는 2007년 한국갤럽의 국민의식 조사를 분석하여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이 긍정에서부터 부정까지 다양한 편차를 이루고,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 행위주체들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정치권이나 정부의 행위주체들에 대한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국가-시민사회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국민의식 수준에서 약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의가 강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담론이 국가경제 및 민족생존을 위한 새로운 ‘발전’ 전략이라는 시각(윤상우 2009) 하에서 수용되었다. 국가-관념 수준에서 국민(민족)국가의 비중은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 제도적 국가개입의 축소와는 별도로 분석되어야 한다.

한국은 해방 후 사회에 대한 국가의 “과대성장”, 즉 식민지 통치 시절부터 해방 후 한국전쟁, 유신 등을 거치며 사회의 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국가 관료주의적 통치가 발달한 역사기간동안 자생적인 사회세력이 성장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최장집 1989). 국가의 선도 아래 관료-재벌-노동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도록 하였던 한국의 발전주의 경제 정책 실천(practice)은 “지배적이고 통합된, 자율적인(Migdal 2001, 16)” 국가 이미지(image)와 강한 수준에서 일치되었다. 특히 박정희 정권 기간 형성된 국가주의 민족주의의 강한 영향력은 민족국가의 도덕적 정당성이 국가 정책과 사회 전반에 강력하게 침윤되는 계기가 되었으며(김일영 2006; 김동노 2010), 이는 시민사회의 민주화 운동 역시 국가가 동원한 민족주의적 어휘(vocabulary)를 매개로 민족(국가) 공동체 관념을 동원하여 진행된 역사적 경험으로 이어진다(Seo 2009). 한국 근현대사에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최종 심급은 국가의 정치적 결단에 있었으며 성장과 분배도, 자유와 평등도, 민주화도 그러한 ‘국가의 이름’을 거치지 않고는 설득력을 얻기 힘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잔상은 현대 한국 사회 곳곳에 남아있어 특정 사회 세력이 전유하는 국가 이미지의 강도와 현실 정책 실천사이의 괴리/일치에 따라 다양한 정치행위를 야기한다.

예컨대,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국가-체계적 변화로 인해 물리적으로 국가가 축소될 수 있다. 이에 과거의 국가-관념을 강하게 유지하는 사회 세력은 과거에 대한 일종의 ‘구조적 향수(structural nostalgia, Herzfeld 1997)’, 즉 도덕적으로 이상화된 강력하고 일관된 국가 관념을 근거로 현실의 국가 정체성 혼란에 대해 일종의 불만을 표출하거나, 또는 현재 국가의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 국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은 ‘신자유주의 도입=시장 중심=자본주의=국가 발전의 지속’이라는 구도로 신자유주의를 지지하기도 하며, 반대 세력은 ‘신자유주의 도입=시장 중심=국가의 퇴조=국가 저발전’의 구도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기도 한다.

한국 근대사에서 국가의 ‘폭압’에 저항해왔다고 일컬어지는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기간 동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IMF프로그램 도입,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신자유주의의 수용 역시 기존의 민족적 공동체 관념을 강조함으로써 가능하였다.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국제 자본에 대한 차관 및 투자 도입 등 금융자본의 전지구적 확대 역시 ‘국가 경제의 이바지’한다는 기존의 국가-관념의 유지와 재생산을 통해 이루어졌다. 즉 “제2의건국” 담론과 국가주도의 한-미 FTA 담론은 국가가 일반 대중에게 신자유주의의 ‘불가피성’을 설득함과 동시에, 기존 민주/민족 세력으로 스스로를 위치 지어온 정권 인사들 스스로를 설득시키는 과정이었다.

“제2의건국” 프로젝트의 성과 자체는 실패했다고(송백석 2005) 평가될 수 있다.⁹⁾ 하지만 신자유주의 도입 과정은 기존의 친서민-친노동 야권 행보를 달려왔다고 평가되었던 김대중 정부의 정책결정이 ‘반재벌’ ‘민주적’이라는(Lim and Jang 2006: 447-448), 그래서 ‘민족적’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특히 2002년 월드컵의 ‘4강 신화’ 등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애국적 자긍심이 강조된 정치사회적 맥락 등 심리적 알리바이(alibi)를 매개로 원활히 진행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역시 동북아 담론의 연장-방향선회라는 입장에서 고려되어 국가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정당화되었다. 모두 국제사회 맥락에서 신자유주의가 자본축적에 유리하다는 ‘전략적 선택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한국 근대사 담론에 내재된 강력한 국가민족국가주의의 맥락에서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헤게모니 담론 전략을 필요

9) 송백석(2005)은 “제2의건국”을 실패한 헤게모니 프로젝트로 지칭하며 그 원인을 정부주도의 “위월회”조직이 민주화 이후 관-민관계의 축에서 시민사회와 대립적인 ‘위험한’공권력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이는 그가 제출의 이론을 민주세력-반민주세력 사이의 대당적 관계에 주목한 나머지 한국 사회를 민주화세력-비민주화세력으로 양분하고 일반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를 동일시하여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민주화세력, 시민사회 전부의 반발로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임성호(2007)의 연구를 참고하면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는 같지 않으며, 시민단체가 민주 세력으로 분석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시민사회 전체의 특징으로 동일화 할 수 없다. 즉 송백석이 언급한 관-민이라는 대당적 관계의 한 축인 시민사회는 일반 국민의 인식 속에 애초에 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로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경쟁력 있는 국가—관념’은 국가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이상이며, 여기에는 한국 경제의 발전주의적 국가전략과 신자유주의적 전략이 맞닿아있다. 이러한 관념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내면화된 헤게모니적 민족주의(Seo 2005, 144-153)로 한국사회에 남아 관념수준에서 일관된 국가 통치성을 유지해나간다.

IV. 결론

한국의 신자유주의 도입은 신자유주의의 일반적 특징 중 ‘국가경쟁력 강화’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선택되었다. 즉 기존 발전국가 모델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맥락에서 국제자본의 자유로운 유입, 임금 상승 억제 및 노동의 양적 유연화, 경쟁을 통한 시장 행위자(기업, 노동자 개인)의 혁신과 자기계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는 제도적 민주화와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경쟁력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의 반복을 통해 정당화되고 정책결정자들과 일반 대중에게 수용되었다. ‘시장 규칙 확보를 통한 독과점 방지 및 공정 경쟁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이미지 역시 국가 경쟁력을 강조 및 강화하는 목표로 수렴하였다. 국가와 사회, 시장과 개인이 시장중심의 윤리로 재편성되는 신자유주의 수용이 ‘경쟁력 있는 국가—관념’이라는 기존 국가 통치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맥락 위에서 진행된다는 점, 또한 반대로 개인, 시장,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윤리 습득이 기존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를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점¹⁰⁾이 한국의 “민족주의적 신자유주의”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그 담론에 수용 될 수밖에

10) 이는 앞에서 제시한 CONTACTUS의 임원진의 발언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우리나라에는 중복세력이 많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원이 10만명이나 된다는 걸 알고 있다. 베트남이 붕괴된 것도 이런 사람들 때문이다. 이 중에는 김정일 수첩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북한에 갔다 온 사람도 많다. 중복세력을 때려잡는다는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시사인Live 2012/08/13).

에 없었던 맥락이나 그로 인해 등장하는 새로운 사회세력과 행위자들이 겪는 실질적인 정치경제적 현상들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 분석되어야 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국가-관념에 대한 담론 분석이 정책결정자들에게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주요 사회세력의 행위자 및 전반적 국가인식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향후 과제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하지만 본 연구의 말미에 살펴보았듯, 한국의 근현대사 전개를 통해 형성된 한국의 '경쟁력 있는 국가-관념'은 특정 정책의 정치적 정당성을 정책결정자들과 일반 대중에게 납득시키는 기제로 한국 사회 저변에 내면화되어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친기업주의(이연호 2013, 244-277)로 칭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성격 역시 국가-관념의 관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제기된다. 하지만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의 경우 본 연구가 염두에 둔 국가-체계와 국가-관념의 불일치를 넘어 국가-관념의 신자유주의화라는 별도의 주제로 분석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경식. 1992. 『가난 구제는 나라가 한다』. 서울: 도서출판 삶과 꿈.
- 강명구·박상훈. 1997.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 ‘신한국’에서 ‘세계화’까지.” 『한국 사회학』 31(봄), 123-159.
- “국가가 키운 폭력을 파는 괴물.” 『한겨레21』 제923호(2012/08/13),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2671.html (검색일: 2013년 5월 13일).
- 국정홍보처. 2006. 『한미 FTA를 말한다』. 대한민국정부.
- 김관옥. 2011. “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 『국제정치연구』 14권 1호, 275-300.
- 김동노. 2010. “한국의 국가통치전략으로서의 민족주의.” 『현상과 인식』 111호, 203-224.
- 김양희. 2008.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아대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향과 전망』 74호, 44-80.
- 김영삼. 1993. 『2000 신한국: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 청사진』. 서울: 동광출판사.
- 김일영. 2006. “박정희 시대와 민족주의의 네 얼굴.” 김영자 엮음. 『한국 내셔널리즘의 전개와 글로벌리즘』 335-67, 서울 : 백산서당.
- 김주희. 2012.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추진 요인 연구 - 노무현의 지정학적 인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영. 2007. “신증상주의에서 신자유주의 통상국가로?” 『21세기정치학회보』 17권 2호, 149-165.
- 김현중. 2010. 『김현중, 한미 FTA를 말한다』. 서울: 흥성사.
- 노무현. 2006a. 2006년 신년연설(2006년 1월 18일),
http://www.pa.go.kr/online_contents/speech/speech02/1309839_6175.html
 (검색일: 2012년 8월 10일).
- _____. 2006b.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2006년 3월 23일),
http://www.pa.go.kr/online_contents/speech/speech02/1309863_6175.html
 (검색일: 2012년 8월 10일).
- 박용수. 2011. “노무현대통령의 한미FTA 추진이유: 대통령 리더십을 통한 접근.” 『평화연구』 19권 1호, 39-74.
- 송백석. 2005. “제2건국운동 실패의 이론적 고찰.” 2005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

- 회 논문집. 6월, 535-551.
- “용역업체 임원 “중복세력 때려잡은 것”.” 『시사인Live』(2012/08/13),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24> (검색일: 2012
년 8월 14일).
- 우정은. 2003. “한국의 미래를 비추는 세 개의 거울.” 『창작과 비평』 120호, 12-27.
- 유종일. 2006. “참여정부의 “좌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창작과 비평』 133호, 299-311.
- 윤상우. 2009.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변화와 정책
대응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38호, 40-68.
- 이연호, 임유진, 정석규. 2002. “한국에서의 규제국가의 등장과 정부-기업 관계.” 『한국정
치학회보』 36권 3호, 199-222.
- 이연호. 2000. “김대중정부의 경제개혁과 신자유주의적 국가등장의 한계: 동아시아 개발도
상국의 한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33권 4호, 287-307.
- _____. 2002. “한국에서의 금융구조개혁과 규제국가의 등장에 관한 논쟁.” 『한국사회학』
36권 4호, 59-88.
- _____. 2006. “한국에서 민주주의 심화가 조정국가(Regulatory State)의 변화에 미친 영
향.” 『신아세아』 13권 2호, 26-54.
- _____. 2013. 『불평등발전과 민주주의: 한국정치경제론』. 서울: 박영사.
- 이장규. 1991.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 전두환 시대의 경제비사』. 서울: 중앙일보·
중앙경제신문.
- 이해영. 2005. “신자유주의와 FTA.” 『진보평론』 23호, 9-23.
- 임성호. 2007. “한국 민주화와 국가-시민사회 이분법의 한계: 국민인식의 관찰.” 『OUGHTOPIA』
22권 1호, 169-201.
- 장상환. 2005. “시장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황해문화』 49호, 39-66.
- _____. 2007. “한미 FTA와 한국 사회의 양극화.” 『실천문학』 87호, 369-396.
- 정태환. 2005. “김영삼 개혁정치의 성격과 정치적 동원.” 『한국학연구』 23호, 281-306.
-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1999. 『제2의 건국』.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2003. 『[제2집] 제2의건국운동 백서』. 서울: 제2의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
- 조성렬. 1996. “노태우 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0권 2호,
187-208.
- 지주형. 2009. “한국 국가형태와 권력행사방식의 전환 : 권위주의 개발국가에서 신자유주

- 의 국가권력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3권 4호, 175-203.
- _____. 201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서울: 책세상.
- 최장집. 1989. “과대성장국가의 형성과 정치균열의 전개.” 최장집. 『한국현대정치: 구조와 변화』 (서울: 까치), 81-113.
- 최장집 · 박찬표 · 박상훈. 2007. 『어떤 민주주의인가』. 서울: 후마니타스.
- 최태욱 · 이정우. 2007. “한국사회, 시장만능주의의 덫에 걸리다.” 『창작과비평』 136호, 255-286.
- 홀, 스텐어트. 2007. 『대처리즘의 문화정치』. 임영호 옮김. 서울: 한나래.
- Amsden, Alice H. 1992. “Getting Relative Prices ‘Wrong’: A Summary.” in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39-155.
- Balibar, E. “The Nation Form : History and Ideology.” in Étienne Baliar and Immanuel Wallerstein,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London: Verso, 1991), 86-106.
- Cheng, Tun-jen, Stephen Haggard and David Kang, 1998. “Institutions and Growth in Korea and Taiwan: The Bureaucracy.”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34 No.6, 87-111.
- Foucault, Michel. 2007.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7-1978*. New York: Panlglave Macmillan,
- Gills, Barry. 1996. “Economic Liberalisation and Reform in South Korea in the 1990s: A ‘Coming of Age’ or A Case of ‘Graduation Blues’?” *Third World Quarterly* Vo.17 No.4, 667-688.
- Gray, Kevin 2011. “The Social and Geopolitical Origins of State Transformation: The Case of South Korea.” *New Political Economy* Vol. 16 No.3, 303-322.
- Greenfeld, Liah. 1992.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US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ckworth, Jason. 2007. *The Neoliberal Cit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Harvey, David.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eo, Uk and Terence Roehrig. 2010. *South Korea Since 1980*. New York: Cambridge

- University Press.
- Herzfeld, Michael. 1997. "Structured Nostalgia: Time and the Oath in the Mountain Villages of Crete." in *Cultural Intimacy: Social Poetics in the Nation-State* (New York: Routledge), 147-82.
- Im, Hyug Baeg. 1987. "The Rise of Bureaucratic-Authoritarianism in South Korea." *World Politics* Vol.39 No.2, 231-257.
- Jenson, Jane. 1990. "Representations in Crisis: The Roots of Canada's Permeable Fordism."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23 No.4, 653-683.
- Jessop, Bob and Ngai-Ling Sum. 2001. "Pre-disciplinary and Post-disciplinary Perspectives." *New Political Economy* Vol.6 No.1, 89-101.
- Jessop, Bob. 1990. *State Theory - Putting Capitalist States in their Place*, GB: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Jessop, Bob. 1999. "Narrating the Future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National State: Remarks on Remapping Regulation and Reinventing Governance." in *State/Culture: State-Formation after the Cultural Turn*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378-405.
- _____. 2004. "Critical Semiotic Analysis and Cultural Political Economy." *Critical Discourse Studies* Vol.1 No.2, 159-174.
- _____. 2008. *State/Power - A Strategic Relational Approach*. Cambridge: Polity Press.
- Ji, Joo-Hyoung. 2013. "The Neoliberalization of South Korea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A Cultural Political Economy of Crisis Discourse and Management."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47 No.3, 33-58.
- Kim, Yun Tae. 2005. "Djnomic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35 No.4, 471-484.
- Lee, Byoung-ha and Kim Sungmoon. 2011. "South Korea's Developmental Democracy and Migrant Workers Policy." *Pacific Focus* Vol.26 No.3, 428-455.
- Lim, Hyun-Chin and Jin-Ho Jang 2006. "Neo-Liberalism in Post-Crisis South Korea: Social Conditions and Outcome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36 No.4, 442-463.

- Migdal, Joel S. 2001. *State in Society: Studying How States and Societies Transform and Constitute One Anothe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tchell, Timothy. 1999. "Society, Economy, and the State Effect." in *State/Culture: State-Formation after the Cultural Turn*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76-97.
- Moon, Chung-in and Rashemi Prasad, 1994. "Beyond the Developmental State: Networks, Politics, and Institutions." *Governance*. Vol.7 No.4, 360-386.
- Seo, Jungmin. 2005. "Nataionalism and the Problem of Political Legitimacy in China." in Lynn White(ed.), *Legitimacy: Ambiguities of Political Successor Failure in East and Southeast Asia* (Singapore: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Pte. Ltd), 141-82.
- _____. 2009. "Using the Enemy' s Vocabularies: Rethinking the Orgins of Student Anti-State Nationalism in 1980s Korea."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12 No.3, 125-146.
- Sonn, Hochul. 2009. "Neoliberalism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43 No,5, 75-91.
- Weber, Marx. 1946. "Politics as Vocation," in *From Mar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by H.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77-128.
- White, Gordon and Robert Wade. 1988. "Development; States and Markets in East Asia: An Introduction." in Gordon White, *Developmental States in East Asia* (Hong Kong: The Institute of Developmental Studies), 1-29.

투고일: 2013.08.30 심사일: 2013.10.22 게재확정일: 2013.10.25

【ABSTRACT】

Neoliberal Korea? The Idea of Competitive Nation-State and Korean Political Economy

Seo, Jung Min | Yonsei University
Kim, Hyeon Jun |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investigates how neoliberalism has been infused into Korean political economic policies through the national identity discourses. While other studies of Korean political economy so far have dealt with institutional aspects (state-system), we focus on the symbolic identity of the state (state-idea) as a context in which the strategic selectivity of particular economic policy is constituted thus promotes social consent. The idea of competitive nation-state, which has been retained from the developmental state of the 1960-70s, was emphasized in *The 2nd Nation-Building Movement*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also in the *Northeast Community* discourses and the Korea-US FTA settlement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ese national discourses, characterized as “nationalistic neoliberalism,” reproduced pre-existing idea on the nation-state arguing that the neoliberal reforms were the chance to enhance the competence of the national economy. These discursive processes provided the perceptual alibis for introducing market-centered neoliberal policies regardless of substantial retreat of the state from market and society.

Key Words | Korean political economy, idea of competitive nation-state, nationalistic neoliberalism,